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4
----------	------

발의연월일 : 2024. 7. 4.

발 의 자 : 윤준병·민형배·박민규
이성윤·박홍배·이춘석
정준호·박희승·허종식
김윤덕·서삼석·이해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인구영향평가)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인구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인구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1조의2(인구영향평가)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인구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u>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u></p> <p><u>④ 인구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